# '도시철도 2호선'에 발묶인 광주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2023년 9월부터 전국서 본격 시행 광주 6곳…시행 원년 이후 멈춰 대상 간선도로 대부분 공사 현장 전남작년 6월부터 '지속도입' 대조

운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등·하교 외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이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광주의 경우 시 행 원년 이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꾸준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정체의 원인으로 '지하철 2호선 공사' 가꼽혀당분간속도가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가변형속도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송원초등학교 ▲정암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 ▲만호초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삼육유치원등6곳일대다.

경찰청이 2023년 9월을 기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기 전 시범 운영에 들어간 송원초등학교는 같은 해 4 월,나머지 5곳은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찰이 지정한 이곳들은 다른 스쿨존과 달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

전 8시까진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 하되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스쿨존의 취지와 속도 제 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 으로 도입 초기부터 전국에서 주목해 왔다.

그러나 광주는 2023년 10월 이후 2년이 넘도록 신규 지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지하철 2호 선 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속도 제한 개선의 효능감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도입 기준 상 편도 2차선 이상의 간 선도로가 추진 대상이나 대부분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에 포함돼 있어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주변에 학교가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 고 있다"면서도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차로가 좁 아지고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신호 체계 정 비, 안내 표지·노면 표시 설치 및 우회 동선 문제 까지 겹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

반면 전남은 첫 도입이 광주보단 늦었지만 지난해 6월 영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신풍초등학교(여수), 올해 6월 삼호서초등학교 (영암), 올해 9월 여수남·송현·신월·백초초등학교 (여수) 등 지정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해당 스쿨존의 가변형 속도제한은 오후 9시부

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시간제(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확대 필요 지점 을 수시로 발굴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현 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학교 등의 의견을 취 합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은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 사이의 갈등 을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라며 "공사 구간 외 지역이나 소규모 도입이 가능한 곳부터 단계 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 다. /윤찬웅기자



광주동구 사랑의 김장 나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27일 광주 동구 충장동 마을사랑채에서 열려 동구새마을회 소속 회원들이 130여세대에 전 달할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 흉기들고전 직장 찾은 60대 '공공장소흉기소지' 처벌

시행 7개월여만 광주지법 첫 판결 징역 8개월…"고의성 없어도 범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같은 이상동기 강력 범죄의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4월 '공 공장소흥기소지죄'가 신설된 가운데 광주지법 에서 시행 7개월여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 공공장소흥기소지, 상해 등 혐의로 기 소된 A (60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전 직장이었던 나주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장 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차문을 열고 닫던 중 근처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던 A씨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고의가 없어도 범죄는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살인예비에 대해선 무죄 판결하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요양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야간 또는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범행 대상을 기다리는 등 직접적인 준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또 재판부는 "과거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 러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사회가 바뀌면서 법 이 제정돼 이제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안재영기자

## 5·18 1주년 시위 주도 고교생 재심서 '면소'

#### 40여년만…법원 "개정 집시법 처벌 불가"

5·18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신군 부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집회를 준비한 고교생이 40여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A(60대)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 면소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 4월 군 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광

주 시내 각 고교에 배포하고 관련 시위를 계획 한 혐의로 기소돼 1982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재심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 반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5·18민주화운동 등에관한 특 별법에 따라 올해 4월 개시됐다.

재판부는 "1989년 개정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했다"며 "재심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령은 개시된 지금의 법령을 기준 으로 하는 바, A씨의 공소사실은 형이 폐지됐 을 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 부친 유품 정리하던 20대, 담뱃불 화재로 숨져

고향을 찾아 컨테이너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20대가 담뱃불로 인한화재로 사망했다. 27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고흥군 동강면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

이 났다는 A (20대)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출입구 쪽에 불이 붙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으나, 통화는 이내 끊겼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원 2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35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서 신고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컨테이너 1동(100㎡)이 전소돼 소방추산(16만원상당의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타지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주소지인 고흥 에 내려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머물던 컨테이너에 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 졌다 경찰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주성학기자

#### 횡단보도서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목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 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2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 시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부근 횡단보 도를 건너던 A (70대·여)씨가 시내버스에 들이 받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 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중이었고, 시내버스는 일명 '우회전 일시 멈춤' 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